

물가는 잡았는데 ‘환율 폭병’... 한은, 금리인하 선택법 복잡

한은, 오는 11일 기준금리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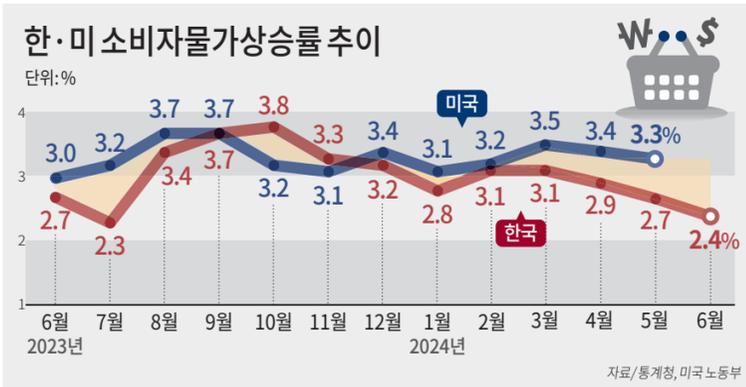
1300원 후반 ‘고환율’ 흐름 지속 미국의 금리인하 시기도 불확실 부동산 상승·가계부채 증가 등 기준금리인하 논의 ‘변수’ 작용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고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이라서 금리인하를 두고 한국은행의 선택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로 0.25%포인트(p) 인상한 뒤 지난 5월까지 11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 물가, 3개월째 2%대 둔화 흐름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의 근거가 되는 요인은 물가 둔화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13.84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



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1%로 높아진 뒤 4월부터 다시 2%대로 둔화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도 2%대 초반을 기록한 상태다.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에도 꺾이지 않던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말까지 3%대를 유지하다 올해 1월부터 2%대로 진입했다. 근원물가는 일시적 외부 충격에 의해 물가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지수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

서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6%로 유지하지만, 하반기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월평균 2.3%에서 2.4%로 변경했다”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3~2.4%로 내려가는 트렌드가 잘 확인되면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1~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평균 2.8% 수준이다. 다만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4%를 기록한 만큼 이달부터 금리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여전히 높은 원·달러 환율... 금리인하 ‘변수’

다만 금리인하를 논의하기엔 변수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수개월째 1300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다. 올해 4월 17일 1395.3원을 기록한 원·달러 환율은 한달 뒤 1349.4원으로 떨어진 뒤 다시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87.4원을 기록했다.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물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금리인하 시점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포럼에서 “직전(물가) 지표와 그 이전 지표들은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물가둔화) 경로를 되돌아가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면서도 “금리를 인하하기에 앞서 인플레이션이 2% 목표 수준으로 지속해서 둔화한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앞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024년 3%에서 2025년 3.6%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인 2%p다. 연준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원·달러 환율이 한 단계 더 치솟을 수 있어 우려스럽고, 대선 이후까지 미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미국의 금리인하 요인(물가둔화)이 사라져 금리인하 시기가 더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움직임 또한 금리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5월 금융권에서 늘어난 전체 가계대출은 9조 5000억원으로 두 달 연속 오름세다.

KB증권 임재균 연구원은 “전년대비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아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겠지만 7월부터는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존재한다”며 “현재 환율 수준, 미 대선에 따른 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하면 한은이 연준 인하에 앞서 금리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1면 ‘현대차그룹, 인니서...’서 계속

“고객 이탈·손익계산법 모호... 금투세, 전면 재검토를”

금감원장-증권사 CEO 간담회 CEO들 “세부적 징수기준 없어 관련 시스템 보완 사실상 곤란해” 개인투자자 “시장위축” 우려 목소리

국내외 주요 증권사 CEO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두고 내년 시행은 실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금투세 시행 시기가 다가올수록 자본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황선오 금융투자부 부원장보를 비롯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국내 주요 증권사 14개사, 외국계 증권사 2개사 CEO 등 총 24명이 참석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증권업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사회적 총의’를



이복현 금감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장-증권회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모듬발언하고 있다. /뉴스시

모아 해결돼야 한다”며 산적인 이슈들을 제시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 ▲금투세·배당소득세 등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와 관련된 현안 등이 언급됐다.

주요 증권사 CEO들은 현안 중에서도 특히 ‘금투세 전면 재검토’를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이들은 내년 1월 금투세 도입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

완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간담회 참석자들은 세금 납부의 불편으로 인한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 이탈을 우려했다. 또한 “기관 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정확한 손익계산 곤란할 것”이며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 등 투자자 불편도 커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증권사들은 금투세 도입을 위한 시스템 보완을 요구했다.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처럼 5월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투세 자체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금투세 도입 시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오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자본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 6월 6만9184명의 동의를 얻은 국민동의청원이 소관위원회 기획재정부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5월 같은 주제로 6만5449명을 모은 적도 있지만 해당 청원은 임기 만료 폐기된 이력도 있다.

현행으로는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0.18%의 거래세만 부과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연 500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투세 도입으로 ‘큰 손’들이 증시를 떠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인니 전기차 활성화 동남아시아 전체에 경제적인 기회 제공”

현대차그룹은 이번 HLI 그린파워 준공을 통해 인도네시아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셀부터 완성차까지 현지에서 일괄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톱티어 브랜드 도약을 위해 EV 라인업을 확대하고 고객 경험과 충전 서비스 강화에 집중한다.

206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2030년에 60만대의 전기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전기를 구매할 경우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적용 중인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카르타 등 주요 도시에서 12%~15%에 달하는 등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추가로 현지 부품과 인력 등을 활용해 현지화율 조건을 만족하는 전기차는 사치세(15%) 면제 및 한시적으로 부가세 10%p 감면 혜택(11% → 1%)을 받는다.

정부에서 사용하는 차량도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만대 이상, 총 13만여 대를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희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자원 순환형 수소 솔루션에서부터 미래 항공 모빌리티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영역을 함께 개척하겠다”며 “우리는 ‘뭉부까 잘란 바루(Membuka jalan baru,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의 정신으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산업부,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기지 만든다

2030년 연간 6GW 목표 방안 마련

정부가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의 핵심입지로 구축한다. 2030년까지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량을 6기가와트(GW)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호텔코리아나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무탄소에너지 수요 확대에 발맞춰 원전과 함께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 태양광 6GW 보급을 목표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연간 6GW 이상의 도전적 보급전망 실현을 위해서는 계통부담, 주민수용성 등 문

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산업부는 거주 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업지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산업에는 기업이 밀집해있어 전력소비가 많고, 연도별 설치량도 증가 추세다.

우선 입지 확보, 인허가, 설비운영의 사업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현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기간

을 단축한다. 운영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성 확보를 지원한다.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을 위한 공공의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입지 발굴, 공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비롯해 총 240메가와트(MW) 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